

"새정부의 국민진상조사위원회는 집배원 과로사 문제 해결해야"

노동과세계 변백선 | © 승인 2017.08.10 13:34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 출범 선포
국민참여조사위원회 구성·집배인력 대폭 증원 촉구



노동, 종교, 법률, 시민사회단체가 집배노동자의 연이은 사망을 멈추기 위한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노동과세계

2017년 들어 집배원들의 연이은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집배원 죽음의 행렬을 신속히 멈춰야 한다는 공감대에 노동, 종교, 법률, 시민사회단체가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들은 10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출범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집배노동자 과로사 해결을 위한 국민참여조사위원회를 요구하고 부족한 집배노동자를 즉각 증원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집배원들의 업무는 정부기관에서 하는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앞세우다보니 최소 인력으로 최대의 일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업무 내내 달리기를 하는 것 같은 110의 심박수에 12시간씩 일을 하고 있으며 과로로 쓰러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집배원을 포함한 한국사회의 과로 원인은 정확하게 인원부족이라는 한 가지 원인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이 현재에도 약 120여명이 남는다는 말을 하고 있다. 또한 '집배원이 초과수당을 받기 위해 일부러 일찍 출근한다'는 망발을 쏟아내고 있다"며 "임금을 준다는 이유로 집배원의 노고를 폄하하는 이러한 갑질은 공직사회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할 적폐"라고 규탄했다.



노동, 종교, 법률, 시민사회단체가 집배노동자의 연이은 사망을 멈추기 위한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노동과세계

대책위는 "집배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 및 조사도 진행되었지만 어떤 연구를 하더라도 우정사업본부와의 입장 차이는 컸다"며 "양측의 간극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집배원 죽음의 행렬은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월 3일 안전보건강조주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한 말을 전하며 "문재인 정부의 첫 국민신상조사위원회는 집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조사위원회 구성의 원칙으로 현장참여, 근본적 개혁안, 권고안 이행 강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의 활동 계획으로 전국의 지하철역 포스터 선전,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국회토론회, 우정사업본부 무료노동 근절 및 갑질문화 개선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